

# '주왕산 실종' 11세 초등생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 수색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출로 산행중 실종사고 추정 당국, 신수습후 경위조사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흩날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초6)이 숨진채 발견됐다. 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m)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km 구

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25분경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드론으로 발견한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구 등산로에서 수심m 정도 벗어난 곳이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출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번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경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10분경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A군 부모는 오후 5시53분경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선박 화재 진화훈련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집안 환일 국제여객선(126875)에서 차량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비상 소화 및 인명구조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광안시방서, 부산항공사, 한국선교, 부관해리 등 관계자 100여 명과 소방서 7대 등이 동원됐다. /연합뉴스

# '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웃돈 붙자 고소·고발하다 일당 덜미

### 아파트 부정청약 5명 송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추가 보상을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2023년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권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결과 A씨는 단지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했다. A씨는 C씨 소고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법 B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정제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제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씨와 D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신고하러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은란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후 A씨와 D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 원 형사 입건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작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15명 사상

### 사상자수 전년비 26.4% 급증 3년간 285명... 학교시간 집중 보호의무·신호 위반 46% 달해

지난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도 91명에서 26.4%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세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사상자는 285명으로, 학기 중인 4월, 7월, 10월에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49.6%)이 하교 시간(오후 2~6시)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27%), 신호위반(19%) 등 운전자 과실이 많았다는 게 경찰

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등교 시간대에 맞추 한 차례 실시 중인 집중단속을 학교 시간대에도 하기로 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을 포함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하북경찰에는 화년별로 학생 이동이 분산되는 만큼 도보 순찰로 공사 현장 등 사각 취약지도 점검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영장 기각' 스토키, 前 여친 찾아가 자해 사망

###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스토키 혐의로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 안산상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B씨는 업소 안에서 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번날인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조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조치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 등록, 임시 속삭이 제품과 민간 경호 지원 등을 안내했다. 다만 B씨는 임시 속삭이 및 경호 지원을 거절하고 일정 기간 타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잠시 업소를 찾은 시점에 A씨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송문근 기자 ygs@siminilbo.co.kr

# "남치·김급 당했다" 허위 신고 법, 30대에 징역 8개월 징유

### 울산지법 형사1부 배은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울산지법 형사1부 배은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일회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지에서 발전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공기전화로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급은 행동을 반복해다가 "배신자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한 후 남치·김급했다.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울산=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법, 고법판사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숨진 신중오 고법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5-2부 소속 신중오 고법판사가 법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신 고법판사는 생전 주변에 과중한 업무와 재판 일정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린전

# '후불제 여행' 회원 모아 선입금 100억 먹튀

### 50대 2심서 징역 9년2개월 피해자 수천명... 변제 못받아

여행 경비를 나중에 납부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한 뒤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사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단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큰돈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계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만을 나타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

하던 여행 경비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선입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20억원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최종 피해액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20여 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후불제 여행에 가입한 회원이 수천명에 달했다. 가입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 퇴직 여행 등을 기대하며 장기간 회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여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납입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상황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약속 이행 지연 이후에도 회원들의 연락 및 대응을 회피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